
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7.

발 의 자 : 김용만 · 이정문 · 조승래
이인영 · 염태영 · 이훈기
최민희 · 강준현 · 이강일
김용민 · 이기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·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·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,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통령령·부령·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,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

이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).
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 후단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그 조치 결과(요청받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)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9조(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)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·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(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·훈령·예규·고시·조례·규칙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·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제59조(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통보하고,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-----. ② ----- ----- -----하며, 그 조치 결과(요청받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)를 법제처장

	<u>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</u> <u>각 제출하여야 한다.</u>
--	---